

시론



김영호

- 현)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 대통령 통일비서관
- 일본 게이오대학교 초빙교수
- 외교부 정책 자문위원
- 세종연구소 상임객원연구위원

우적관(友敵觀) 분명히 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할 때

서울 용산에 있던 한미연합사의 한강 이남 평택 이전이 졸속으로 결정됐다. 서울 주둔 한미연합사의 남하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미국의 ‘인계철선(引繼鐵線)’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인계철선’은 뇌관으로 연결되는 가느다란 선으로 여기를 건드리면 폭탄이 폭발한다.

역대 정부는 서울 사수를 위해 한·미 군사동맹조약에 없는 ‘자동 개입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 아래 한미연합사를 서울 중심부에 유지해 왔다. 나토조약 제5조는 회원국이 공격당하면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자동개입 조항을 두고 있다. 한미동맹 제3조는 자동개입 조항은 없고 두 나라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개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미국은 6·25전쟁 직후 미국 제2사단과 제7사단을 서부전선에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도록 배치했다.

그러다가 닉슨독트린으로 제7사단이 철수했고 현재 제2사단은 모두 한강 이남으로 내려갔고 상징적으로 한미연합사만 용산에 남아 있는 상태였다. 국민뿐 아니라 미군도 북한

핵과 장사정포 공격의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 사실이 미국의 자동 개입을 보증해 북한에 대한 확고한 군사적·상징적 억지력 역할을 해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는 휴전선 이남 일정 지역에서 군사훈련과 작전은 물론 비행기·헬리콥터·정찰기·드론 등을 일절 운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 합의서 조치들과 한미연합사 이전 결정을 합쳐 보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남침 시 과연 '서울 사수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안보협약에서 연합사를 국방부 안으로 옮기기로 미국과 정식 합의했었는데, 국가안보의 중차대한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했다. 이제 국민은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의 말을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됐다.

군인은 민간인들과 달리 완전히 다른 사생관(死生觀)을 갖고 오로지 대한민국 헌법 제 5조가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명확히 구분하라는 군에 대한 국민의 엄숙한 명령이다. 문 정부는 '5년짜리 정권'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이번 한미연합사 이전 졸속 결정은 '5년 정권'이, 영원히 존재해야 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주적(主敵)이 없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백서에는 '북한 = 주적' 개념이 빠져 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이라는 용어가 삭

제되었다. 그 대신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적시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한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같이 과거에도 대북한 유화 정책을 펼친 정부는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이 개념을 삭제했다. 그 이후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명시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빠지게 된 것이다.

북한을 주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 이번 국방백서는 군사전략의 기초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모든 나라는 국력과 군사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정 국가가 처해 있는 여건을 평가하고 그 여건에서 생겨나는 위협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전략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 여건을 무시하고 "모든 세력이 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력의 한계를 무시한 비현실적이고 과대망상적인 사고이다.

주적을 적시하지 않고 미래에 다가올 적을 모두 적이라고 상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군사작전계획을 마련하고 평시에 군사대비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엄연히 북한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존적 적'인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북한 눈치보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전체주의체제로서 조선노동당이 지배하는 '당통제국가'이다. 당이 군과 모든 사

회를 지배하는 체제이다. 노동당 규약은 대한민국을 적이고 타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난 70년간 내내 무너뜨리기 위해서 재래식전쟁을 일으켰고 전복전을 해오고 있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 정치사상가 칼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정치는 친구와 적을 구분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국가가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우리가 그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궤멸당되고 말 것이다. 이번 국방백서를 보면 남북관계에 이런 위협한 상황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이 북한=주적이라는 개념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존재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자력으로 그 적에 대항하고 억제하지 못할 경우 동맹 체결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동맹의 형성과 지속 조건은 바로 위협 인식을 국가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하는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상정하고 구축되어 있다. 위협 인식을 공유하지 못할 때 동맹은 해체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 인식’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군사력, 공격적 군사전략, 공격적 의도, 과거 침략 경험, 정치체제의 특징을 기초로 해서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6번의 핵실험을 통해서 수십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노이 회담에서서 김정은은 북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판 파키스탄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지금까지 우리 군이 경험해보지 못한 군사적 위협인 것이다.

미국 CIA의 문서들을 보면 위협 인식을 평가할 때 적대 국가의 군사적 능력을 의도보다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아무리 위협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위협을 현실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더 많은 핵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비밀리에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시하고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군은 장사정포와 같은 재래식 무기도 70% 이상을 휴전선 가까이에 배치하는 공격적 군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1950년 이미 한번 남침을 한 적이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서 남한 적화를 명시해두고 있는 ‘혁명적 전체주의체제’이다. 이런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우리의 위협이 아니고 주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한미연합사 이전 사태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국가를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히틀러는 독일에 대해서 유화정책을 펴는 유럽 국가들을 싸울 의사가 없는 겁쟁이들로 보고 영토 침략을 계속하다가 급기야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유화정책은 한미공조체제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안보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니까 한미연합사를 줄속으로 마음대로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면서까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해도 문제 없다는 '5년 정권'의 생각을, 혈세로 국방비를 부담하는 국민은 이해 못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핵심은, 친구와 적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 적에 대해 '위협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문 정부는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론'이라는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휘둘려서 우적관(友敵觀)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다. '종족적 민족'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총부리를 겨눈다고 하더라도 '남북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살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한미연합사를 서울 이남으로 쫓아내도 된다는 것인가.

김정은이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는 생각을 가진 송영무 前 국방장관이 남북 군사 합의의 책임자였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그가 그런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이제 국군이 붉게 물들어 가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핵무기를 20개 이상 가진 북한이 '현존하는 위협'인데, 시대착오적이고 위정척사파 식인 '자주의 논리'를 내세워 잘 작동하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허물고 있다. 이런 비상식적 행동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궁극적 지향점이 단순히 연합사 서울 이남 이전이 아니라 해체라고 해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안보의 근간을 허무는 '5년짜리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민이 국가안보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